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50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6년 7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7 July

## 육아지원정책의 출산율 제고 전략은?

### I.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갖는 양육부담 완화의 효과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육아물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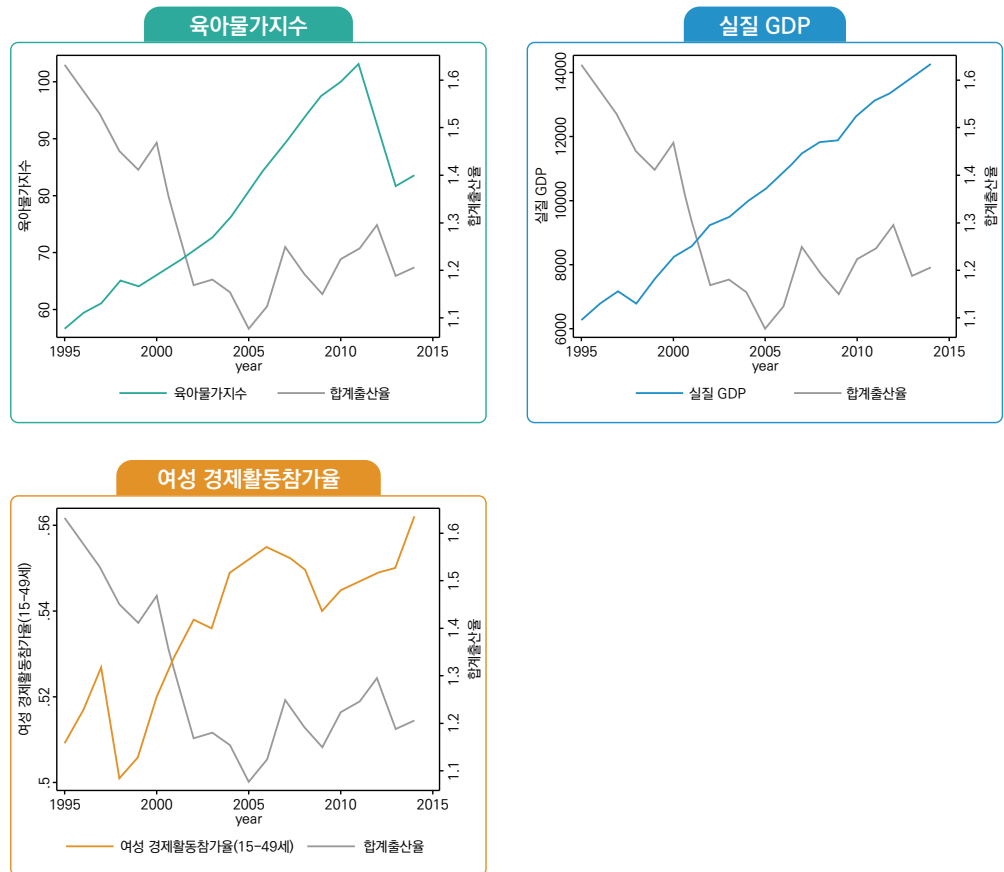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후 저출산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었음.
  - ▶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나, 자녀양육과 교육 관련 비용 부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우리나라는 부모의 직접적인 보육비용 뿐 아니라 학령기에 수반되는 자녀교육비 역시 높은 수준임.
  - ▶ Becker와 Lewis(1974)는 양과 질의 상충관계(quantity-quality trade-off)에 의해 자녀양육 비용이 증가하면 고비용이 드는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투자의 질을 제고하는 대신 자녀의 수를 줄이는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음.<sup>1)</sup>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이 대표적임(제2/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sup>2)</sup> 그러나 이러한 양육부담 완화의 정책효과가 상위 목표인 저출산 대응에는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과 논의는 부족함.
- 이에 양육부담의 완화를 시장가격 측면의 육아물가 변화로 보고, 육아물가의 하락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3년부터 「KICCE 육아물가지수」산출을 통해, 육아지원의 확대가 주요 육아품목의 시장가격 측면에서 영유아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음.<sup>3)</sup>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연구과제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최윤경·박진아·우석진·배지아, 2015)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1) Becker, G. S., & Lewis, H. G. (1974).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In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pp.81-9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5.31).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보도자료 -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3) 최윤경·박진아·이세원(2013). KICCE 육아물가지수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박진아·최종화(201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박진아·우석진·배지아(2015).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II. 저출산과 관련 있는 변인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추세 분석을 통해 출산율과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 양상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행된 2005년을 기점으로 주요 변인들과 합계출산율의 관계가 양(+)의 관계로 전환되었음.

-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진 육아물가지수, 실질 GDP,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간의 시계열 패턴은 [그림 1]과 같음.
  - ▶ 합계출산율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행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1.2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 육아물가지수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보편적 육아지원이 본격화 된 2012년부터 크게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2012년 이후 육아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양육비 부담의 완화를 확인할 수 있음.
  - ▶ 실질 GDP는 IMF 위기 시기인 1997년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에서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 GDP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1] 출산율과 주요변인의 시계열 관계

출처: 최윤경·박진아·우석진·배지아(2015).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p.136.

- 육아물가지수-실질GDP-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출산율의 상관분석에 의하면 출산율과 다른 변인의 관계는 대부분 음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 육아물가(양육비 부담)가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실질 GDP가 커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역'의 관계를 보임.

〈표 1〉 주요변인간 상관계수(1995-2015)

	합계출산율	육아물가지수	실질 GDP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	1			
육아물가지수	-0.717* (0.0004)	1		
실질 GDP	-0.752* (0.0001)	0.914* (0.0000)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0.809* (0.0000)	0.780* (0.0000)	0.886* (0.0000)	1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출처: 최윤경·박진아·우석진·배지아(2015).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Ⅲ). p.135.

\*  $p < .05$ .

- ▶ 그러나 출산율과 다른 변인들 간의 '음'의 관계가 2005년 이전에는 비교적 분명하나, 2005년 이후에는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양'의 관계로 전환됨을 알 수 있음 (그림 1 참조).
  - 출산율과 GDP,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육아물가가 상호 양의 관계로 선회하는 경향은 출산과 경제지표 및 정책 지원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음을 추측하게 함.
-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비용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함.
  - ▶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하여 그랜저 인과 검정과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육아물가의 변화는 출산율의 변화에 상호 그랜저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율의 변화는 주로 실질 GDP의 성장률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출산율과 육아물가(양육비 부담)의 관계는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고, 출산율과 실질 GDP 성장률간의 양의 관계만 유의하게 나타남.

신고전학파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 육아물가의 변화(양육비용의 부담 완화)가 출산율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음.

### Ⅲ. 시사하는 바는?

향후 저출산 대책으로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와 함께 육아지원정책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이 갖는 육아물가 변화(양육비 부담 완화)의 효과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용한 시계열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임. 반면, 2005년 이후 출산율과 거시지표간 상관관계의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 GDP 성장과 같은 거시지표의 상승이 출산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여줌으로써, 출산율은 사회경제 발전의 전반적인 생활상과 연동함을 알 수 있음.

- ▶ 육아물가지수, 실질 GDP,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2005년까지는 명확한 음의 관계를 갖다가 2005년 이후 양의 관계로 전환되는 추세는 정책효과와 측면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대체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 하락에 대한 유의한 선행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반등의 저지선(합계출산율 1.2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육아물가의 변화(양육비 부담 완화)라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정책효과가 일부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실질 GDP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이러한 가설은 보다 장기적으로 축적된 시계열자료를 통해 유의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출산정책으로서의 육아지원 설계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필요로 함.
  - ▶ 첫째, 여성의 취업이 M자형 곡선으로 여전히 자녀양육과 취업 병행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나, 추세분석에서 여성의 완만한 경제활동참여의 상승이 출산율의 상승과 동반하는 관계를 보임.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정책을 저출산대책의 주요 정책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의 정책을 비공식 시간제 일자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확대 전략이 요구됨.
  - ▶ 둘째, 육아지원을 위한 비용지원 정책이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을 볼 때, 육아지원정책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는 좀더 장기적인 자료의 축적과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셋째, 출산 의향이 있고 실제 출산을 이행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차별화된 지원 설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으로서 육아지원 정책은 출산의향과 출산력이 있는 가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지원 설계는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및 비용 지원 외에 세제지원 형태로의 확대도 필요함.

우석진 교수<sup>4)</sup> [sjwoo@mju.ac.kr](mailto:sjwoo@mju.ac.kr)  
최윤경 연구위원 [ykchoi@kicce.re.kr](mailto:ykchoi@kicce.re.kr)

4) 명지대학교 경제학과